

지원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예술현장 대토론회

2018. 1. 9(화) 10:30~15:00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실

C O N T E N T S

1부 발제

- 05 <현황 발제>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의 변천사와 현황”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
- <제1주제>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한 창작지원심의제도”
- 21 박만우 (플랫폼 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관장)
- 29 박장렬 (연출가, 서울문화재단 이사)
- <제2주제> “수월성 제고를 위한 창작지원심의제도”
- 35 강경석 (문학평론가, 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 43 정인석 (제작자, 한국프로듀서협회 회장)

2부 토론 및 질의응답

- <패널 토론> 공정성·다양성 vs 수월성
- 51 김성규 (시인, 도서출판 걷는사람 대표)
- 54 김종길 (미술평론가, 경기문화재단 문화산업팀장)
- 59 김종선 (한국민예총 조직정책위원장)
- 68 송인현 (연출가, 극단 민들레 대표)
- 73 오세곤 (연출가, 순천향대학교 연극무용학과 교수)
- 76 이철구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 77 장지영 (기자, 국민일보 차장)

지원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예술현장 대토론회

일시 : 2018년 1월 9일(화) 10:30~15:00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실

프로그램

사회 :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0:30 행사 소개 및 개회

1부 발제

10:40 <현황 발제>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의 변천사와 현황”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

11:00 <제1주제>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한 창작지원심의제도”

박만우 (플랫폼 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관장)

박장렬 (연출가, 서울문화재단 이사)

11:30 <제2주제> “수월성 제고를 위한 창작지원심의제도”

강경석 (문학평론가, 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정인석 (제작자, 한국프로듀서협회 회장)

12:00 점심식사 및 참여자 네트워킹 *점심식사 제공

2부 토론 및 질의응답

12:40 <패널 토론> 공정성·다양성 vs 수월성

김성규 (시인, 도서출판 걷는사람 대표)

김종길 (미술평론가, 경기문화재단 문화산업팀장)

김종선 (한국민예총 조직정책위원장)

송인현 (연출가, 극단 민들레 대표)

오세곤 (연출가, 순천향대학교 연극무용학과 교수)

이철구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장지영 (기자, 국민일보 차장)

14:30 질의응답

*발표자 가나다順 *진행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심의제도개선을위한

예술현장 대토론회

제1부 발제

〈현황 발제〉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의 변천사와 현황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

A R T S
COUNCIL
K O R E A

- 이 글의 목적은 예술위원회 설립 이후(2005년 8월) 시행되어 온 지원심의제도의 변천과정과 시기별(제도별)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심의제도의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음
-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 운영은 2006년 공모사업부터 해당되지만, 위원회 체제에서 비전과 전략목표 방향에 맞춰 심의제도를 설계 운영한 시점은 2007년부터라 할 수 있음¹⁾
- 위원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지원심의제도는 시기별로 크게 5가지로 구분 가능함

1. 2006년 공모사업까지 운영된 지원심의제도

- 2006년 공모사업까지 운영되었던 심의제도 방식은 비록 진흥원 체제 방식이었지만 지원심의의 중점 목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심의결과의 신뢰도 제고와 이를 위한 심의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강화에 있었음
 - 지원심의위원 선정기준으로 범문화계 인사의 고른 참여 보장과 해당분야의 전문인사 선정이 중요했고, 세부 전공 및 활동 장르를 고려, 경향별 형평을 유지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지원심의 참여 실적, 성별, 연령별 균형과 안배 등 심의위원 구성의 계량적 기준을 강화하여 객관성을 높이려고 하였음
- 주요 심의절차로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의 기본방향, 지원심의 기본방침 등을 정하기 위한 **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음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37-42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 8개 분야(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다원예술·문화일반)별로 1인씩 선정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였음
(2005년 위원회 전환 이후에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1) 이 글의 내용은 예술위원회 연도별 지원심의종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된 것임

- 동 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의 기본 방향, 지원심의 기본방침,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지원 우선순위, 지원대상별 지원액 등)을 최종 확정하고,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 심의 등’을 결정함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세부심의방침을 정하고 심의진행, 지원대상 및 지원예정액 책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14개 분야별 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
 - 문화예술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진흥원(위원회) 심의위원 बैं크를 토대로 3배수 내외의 후보를 선정한 후 최종 위촉하였음
 - * (’03년) 8개 분야 8개 분과 83명
 - (’04년) 8개 분야 14개 분과 116명
 - (’05년) 8개 분야 16개 분과 143명
 - (’06년) 8개 분야 15개 분과 149명으로 심의위원 지속 확대
 - 분야별 지원심의 세부방침 결정, 심의 및 평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 배정
- 다시 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지원대상 우선순위와 지원예정액을 토대로 종합심의를 실시하고, 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함
- 심의기준은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왔음. 공통기준으로 사업의 예술(문화)적 수월성,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등임

〈표1〉 공통 심의기준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사업의 예술적 수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되는 프로그램의 창의성 - 기획, 연출, 구성 등의 참신성 및 독창성 - 제작진과 참가단체(개인)의 예술(문화)적 기량 - 연례적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과의 차별성 등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 활동의 연계성 - 계획구현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업 활동의 구체성, 적합성, 실현가능성 - 소요재원 조달 방법과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 기금지원목표의 부합도 -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파생결과의 구현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및 지원목표의 달성도 - 전년도 사업이 해당 분야 발전에 끼친 기여도 및 파급효과(연례적 사업)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주체의 역할과 기능 적격성 - 추진주체의 유사사업 추진실적과 성과

〈표2〉 2006년 공모사업까지 운영된 지원심의제도 개요

구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심의 방향 설정 (위원회 설립 이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11인)으로 구성) - 내부결재 절차를 통해 적정한 심의위원 섭외·진행 - 8개 분야의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지원심의 기본방침 구성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세부방침 결정 → 심의 및 지원대상 결정
심의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심의기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예술적 수월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신청인의 사업 추진 능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혜택사업, 직전년도 미지원 단체, 신설단체 등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여성위원 참여 확대 : '04년 27.6%(32명/116명) → '05년 33.1%(47명/142명) → '06년 35%(53명/149명) - 2005년 : 지원심의위원회 세분화, 향수교류분과와 문화일반분야 심의에 국민 심의위원 위촉(2005), 문학분야 예심제,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 가산점 제도 운영, 지원결정 수용여부 확인 - 2006년 : 시각예술분야 예심제, 심의위원 자기검증제도 도입(기피)

2. 2007~2008년 지원심의제도

-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위원회와 동일한 위원 11인으로 구성되는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지원심의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문예진흥법과 내부 규정과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의사결정주체를 혼돈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어 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지원심의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최종 심의의결토록 관련 규정의 개정 추진

-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 **분야별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추천위원 제도를 신설**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심의위원 구성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권한이 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이 심의위원 선정에 적극 참여하는 심의위원 추천위원제도를 도입
 - **예술위 위원장이 구성한 분야별 2인 내외(위원 1인+전문가 1인)의 심의위원추천위원**을 통해 2~3배수 후보 안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을 확정하도록 함

구분	추진 내용	추진주체
1단계	○ 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확정	위원회
2단계	○ 심의위원추천위원 구성(지원심의 분야별 2인 내외)	위원장
3단계	○ 심의위원 후보 추천 - 지원심의 분야별 2~3배수 후보(안) 마련 - 위원회(사무처)에서 지원신청인(단체) 현황 및 심의위원 인력풀 제공 등 협조	심의위원 추천위원
4단계	○ 심의위원 확정(지원심의위원 후보 순위 확정)	위원회
5단계	○ 심의위원 위촉 - 심의위원추천위원이 추천한 후보자 중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심의위원 위촉 - 위원장의 위촉 행위는 행정 절차적 사항임	위원장

– 심의위원 자격 및 선정 기준, 구성 원칙 신설 또는 재조정

- 심의위원 자격
 -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포함)·비평·연구·기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 문화예술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인사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인사

- 심의위원 구성 원칙
 - 세부 전공 및 활동 장르를 고려하되 경향별 형평을 유지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
 - 문예기금사업 정기공모 지원심의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심의에 참여한 인사 제외
 - 여성 위원들의 구성비를 전체 위원 수의 35% 이상 유지
 - 지역 및 연령별 구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절히 안배하여 구성

– 위원회 및 분야별 심의위원회 운영과 역할

구분	위원회	심의위원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사업 계획 및 지원방향 확정 – 지원심의의 기본방침 확정 – 사업별 분야별 예산 배정 –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액 최종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지원심의 세부 방침 결정 – 지원신청사업 심의 및 평가(채점) – 지원대상사업 우선 순위 선정 및 지원액 배정

■ 지원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업별·분야별(장르별) 특성에 맞는 심의기준 개발 및 심의 운영**

- **통합적 공통 심의기준을 폐지하고 사업별·분야별 심의기준 개발**
- 사업별·분야별(장르별) 특성에 따라 면접(Interview) 심사, 포토폴리오 심사, 영상·음반 등을 활용한 심층 심사 등 실시

■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심의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원심의와 관련한 제반 절차의 규정화 추진**

- 현행 지원심의 관련 규정에서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절차 등 제도가 불비(不備)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제·개정 추진

- 심의위원 심의기피제도 운영 : 심의대상인 지원신청단체 및 개인과 해당 분야에 위촉된 심의위원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시 심의기피제도를 통해 해당 심의위원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표3〉 2007~2008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구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심의위원회 폐지 후 분야별 심의위원회만 운영 - 심의위원 추천위원(분야별 2인 내외)를 구성하여 분야별 2~3배수 후보안 마련
심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확정(위원회) → 심의위원추천위원 구성 → 심의위원 후보 추천(심의위원추천위원) - 심의위원 확정 및 위촉(위원회, 위원장)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 지원대상 결정
심의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공동심의기준 폐지 이후 사업별 지원심의기준 마련 - 채점제 운영 - 기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 - 심의위원의 심의기피제도 운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선정 기준에 해당분야 전문성과 식견, 예술위 지원정책 이해능력, 균형감각, 합리적 토의 가능 여부 등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 포함 - '08년 일정조건을 구비한 법인, 단체에게 적용된 가점 부여제도 폐지 - 위원회가 지원심의 제반사항을 최종 심의 의결하도록 하여 의사결정 주체 일원화

3. 2009년 지원심의제도

-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위원의 심의위원 추천권 배제를 통한 공정성 제고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심의위원 추천위원회 폐지(2008년 12월)
- 외부추천과 내부추천을 병행하여 각 분야의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 풀을 구성함
 - 외부 추천 : 위원회 홈페이지 상시추천제 활용
 - 내부 추천 : 위원회 위원, 분야별 담당자의 추천 반영
 - 심의위원 풀 인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상세하게 조사 후 DB를 구축하고 통합전산망

으로 관리하여 심의위원 구성 외에 위원회 내 각종 업무 추진 및 고객 서비스 자료로 활용함

- 사무처 주관 심의위원 5배수 후보(안) 마련 및 위원회 심의위원 후보 확정
- 기존의 제출 서류에만 의존하던 심의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한해 **심층심의제 운영** 등 심의 책임성 강화
 - 다각도 평가를 위한 인터뷰 심의, 작품의 완성도 예측을 위한 실연심사, 사업추진 기반 및 환경파악을 위한 심의 전 현장실사
- 지원심의의 투명성 강화, 심의위원의 책임성 향상, 지원신청인(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평가기술제 시범 적용**
 - 지원신청사업(지원탈락사업 포함)에 대하여 지원심의위원회 명의로 평가의견을 기술하고 지원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지(단, 심의위원 실명은 비공개)
- 모든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심의 기피제 적용

〈표4〉 2009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구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 및 담당자 추천을 반영한 2,000명 내외의 풀 구성 -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추천제, 위원 및 담당자 추천 반영
심의절차	- 심의위원 풀 구성(위원회, 사무처)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원칙 확정(위원회) → 심의위원 후보 추천(사무처) → 심의위원 확정 및 위촉(위원회)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 지원대상 결정
심의기준 및 방법	- 심층심의제 운영(인터뷰 심의, 실연심사, 현장실사 심의) - 평가기술제, 전체사업 심의기피제 등을 통한 심의책임성 강화
특징	- 심의위원 풀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보다 다양한 후보군 내에서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추천을 통해 선정된 심의위원의 전문성 검증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4. 2010년~2016년 지원심의제도

■ 책임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 일회적 심의에서 탈피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심층 심의와 지속적 평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됨
- 책임심의위원회는 분야별 또는 사업별 외부인사 4인과 사무처 지원 1인(2013년 사무처 직원의 책임심의위원 임명 폐지)으로 구성되며,
- 이 중 외부인사는 서울 이외 지역 인사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기존 심의 위원 풀 후보군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된 자격기준으로 선출됨

○ 심의위원 자격

-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교육·언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인사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인사
- 사무처 직원은 10년 이상 근무자 대상

■ 심의위원 선정 절차

- 사무처에서 각 분야(세부분과)별 3배수의 심의위원 후보안 마련
- 사무처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후보 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
-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순위 및 후순위 후보를 확정·의결
- 심의위원 섭외 과정에서 후보 안에서 섭외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토록 위임함

구분	위원회	심의위원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사업 계획 및 지원방향 결정 - 지원심의의 기본 방침 및 지원 심의기준 확정 - 분야별·사업별 예산액 배정 -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및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방침 및 세부 심의기준 설정 - 지원신청사업의 적격성 심의 및 평가(채점 등) - 지원대상사업 우선 순위 및 지원액 배정안 마련 - 지원사업 성과 및 평가관리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구성·운영

- 신청건수 과다, 전공 장르 보완, 작품원고 심사 등 심의대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의분과 및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심의 효율성 제고(문학분야의 경우 별도 자문위원단 구성 활용)
- 책임심의위원제도를 통해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책임심의위원이 지속적으로 소관분야 사업을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여**하고 지원신청 상담과 자문에도 참여하게 하여 사업의 지속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심의기준 변경
 -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별 기본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별 가중치 및 세부평가 내용을 설정하여 심의하도록 함
- **지원사업 상시공모제 시행**
 - 기존 연 1회 정기공모만 추진하였던 지원사업을 장기 기획사업 등 예술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기공모 이후 상시공모를 추진하여 지원대상이 보다 확대되고 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2015년 3월 이후 2016년까지 추가 및 별도 추진 공모사업은 심의위원 풀 제도를 도입, 사업별·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심의위원 풀 내에서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복지, 문화일반 등 분야별 심의위원 4~10인으로 위촉하여 구성

〈표5〉 2010~2016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구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심의위원회제도 도입을 통한 개별사업 심층 심의 및 지속적 평가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 10년 이상 활동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격 요건 강화
심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사업별 외부인사 3배수 추천 → 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부, 외부 책임심의위원 위촉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 지원대상 결정
심의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집행-성과단계별 기본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별 가중치 및 세부평가 내용 설정 -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기여도 및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설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상시공모제를 시행하여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자 함 - 책임심의위원을 통한 소관분야 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신청 상담,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의 지속적 관리 기반 마련 - 책임심의위원의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심의위원의 균형성 및 객관성 검증 필요성 확인

5. 2017년 지원심의제도

■ 심의위원 후보자 공개추천제도 도입

- 실효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계 현장으로부터 공개추천을 받은 적격인사를 포함하여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도록 함
- 현재 예술계 협회나 단체를 통한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단체로부터만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심의위원 추천제도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17년 심의위원 공개추천제도 경과

- 84개 주요 예술 협/단체 대상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요청서 발송
- 단체별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서 접수
- 62개 단체에서 총 496명 추천, 그 중 중복추천 및 자격기준 미달 제외 총 459명 접수완료
- 공개 추천된 인원(459명)을 기존 후보단(572명)과 합산, 중복인원 제외 후 최종 945명 풀 확정

분야	문학	시각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문화 복지	문화 일반	계
인원	200명	170명	153명	103명	74명	97명	20명	128명	945명

■ 심의위원 후보 무작위 추첨 방식 도입

- 심의위원 선정은 심의위원 후보군 풀을 구성하여 심의 대상 사업에 적합한 분야 및 세부분야를 설정한 뒤 무작위 방식으로 5배수의 심의위원 후보를 감사부 입회하에 추첨하고
- 예술지원 소위원회와 협의하여 섭외순위를 정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 선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만 심의위원에 대한 자격검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인해 심의위원의 적격여부와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가능
- 심의위원 풀 작성 시 본인동의 절차가 없어 풀 포함 여부를 본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에 대한 교육, 개인정보 갱신 등 사전 준비가 어려우며 섭외 시 위촉 거부 등이 발생 가능함

■ 지원심의 음부즈맨 제도 도입

-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음부즈맨이 예술가 및 예술 단체가 이의신청한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도록 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심의제도를 보다 안정화하고자 함

〈표6〉 2017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구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후보군제를 도입하여 주요 예술 협/단체 대상 심의위원 후보자 공개 추천제도 도입 -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필요한 심의분야, 세부장르 등 고려 항목을 기준으로 인원 안배 후 항목별 5배수 내외 위촉대상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심의위원 선발
심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계 공개 풀 추천제를 통한 심의위원 풀 구성 → 분야, 장르 등 항목별 5배수 내외의 위촉대상자 무작위 추첨 → 심의위원 위촉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 지원대상 결정
심의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평가 및 계량평가 확대 적용 - 전문가 및 관객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지원심의를 반영 - 지원심의 이의신청 가능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지원심의 선정 방식은 무작위 5배수 선정을 통해 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제고됨 - 공개 심의위원 추천의 경우 보다 다양한 개인/단체를 통해 풀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투명성과 개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지원심 의 제 도 개 선 을 위 한

예술현장 대토론회

제1부 발제

〈제1주제〉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한 창작지원심의제도

박만우 (플랫폼 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관장)

박장렬 (연출가, 서울문화재단 이사)

A R T S
COUNCIL
K O R E A

제1주제

책임 심의제도 보완을 통한 창작 지원심의 기능 강화

박만우 (플랫폼 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관장)

아직 민간 분야의 기부문화나 후원 활동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국내 환경에서 공적 서비스로서의 문화예술 창작 지원 행위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문화 예술 분야 창작자들의 지원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하는 현실은 지원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60년 이상의 경험이 축적된 문화예술 창작 지원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날로 진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의 현실 앞에서 기존 지원 정책을 쇠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체제 전환 이후 불과 2007년 처음 시행된 지원 심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앞선 기대일 것이다. 이에 더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자체가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에서 퇴행적으로 전개된 문화예술 정책의 총체적 부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이러한 공론의 장은 이제야 본격적 정책 실행의 출발을 가다듬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1. 창작지원 심의제도의 개선 가능성과 조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기존 기금지원 제도의 즉각적인 운영 효율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공공정책으로서 창작 지원 정책의 제반 환경을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원 대상의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 없이 지원 기금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고는 현실을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겠다는 어떤 양태의 공공정책 개입도 부질없는 행정 소산이고 예산 낭비이다.

원론적으로 말해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태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수립된 복지국가 모델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노동자 대중의 사회권 보장을 앞세우는 복지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잠재우고 산업화에 따른 자본주의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과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예술에 대한 공공적 지원 정책을 통한 개입은 20세기 후반 처음으로 사회비판적이고 심지어 전복적인 예술조차 공권력의 행정 대상이 됨으로써 순치되고 마침내 사회에 통합되기에 이르렀다. 모던 아트는 물론이고 역사적 아방가르드 예술의 실험을 관통하며 동시대예술은 때로는 우리가 직시하고 싶지 않은 사회 현실과 이 사회의 가장 부정적인 국면들을 소재로 다루기에 이 시대의 사회는 이런 예술 상황 앞에서 개방과 이해 그리고 관용의 태도를 시험받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문화 복지정책의 일환인 예술 지원정책도 국가의 경기 변화에 가장 민감한 복지 예산 및 정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궤적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예술 지원정책의 기저에도 사회복지의 소득 재분배 원리가 적용되어진다. 직관적으로 보아도 예술 시장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예술인이 자신의 창작 활동을 위해 기금 지원을 신청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예술 창작 지원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본질을 공유하기에 사회적 시민권과 사회 연대의 결과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예술인의 기본적인 사회 보장은 창작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예술인 복지재단과 같은 별도 기관이 있는 만큼 기능과 역할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는 국내 시각예술 창작지원 정책의 주요 환경 요인들에 국한해서 논의하려 한다.

첫 번째 요인은 미술시장의 영향 증대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된 신자유주의 영향 아래 국내 미술시장도 어느 정도의 부침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영향력은 확대되었고 시각예술 생태계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면 ‘미술시장이 미술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의 상위 상업화랑 일부의 주도로 1960년대 이후의 한국 미술의 작업들을 국제 미술 시장에서 재평가 받도록 하면서 가치 증식을 도출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상업적 이득을 기반으로 국내의 우수 작가들을 해외에 프로모션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어서 점차적으로 동시대미술을 다루는 상업화랑은 물론이고 작가들 사이에도 성공

한 소수와 그 외의 다수 집단 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는 공적 수단을 통한 창작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다양성과 같은 가치가 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한 번 더 성찰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두 번째 요인은 시각예술 창작을 위한 좀 더 내재적인 변화와 연관이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예술 창작이 다른 실천 양상을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창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 그리고 제도 등도 마땅히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무빙이미지를 매체로 영상설치미술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경우 일반적인 영화제작이나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 제작과 마찬가지로 프리프로덕션-프로덕션-포스트 프로덕션 절차를 거쳐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협업자, 조력자들과 더불어 때로는 2-3년 이상의 제작 기간을 보내기도 한다. 과연 이런 작업들을 위해 1년 단위의 사업심의회 평가를 하는 기존 창작 지원 프로그램이나 제도는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가 극도로 어렵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융복합 매체환경의 전개에 따라 최근 질적, 양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다원예술 분야도 실제적으로 제작 프로세스를 위해 오랜 시간이 투여되지만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제작 공정을 압축시켜가며 사업단위 해당연도 내에 제작을 완수해야 하는 난관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수혜자 못지않게 지원 기관을 위해서도 '다양성'에 대한 가치 해석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양성은 '다양성 영화'의 용례에서 보이듯 비상업적 예술영화, 소규모 저예산 영화라는 의미로도 읽히지만 일반적으로 다양성이 함의 하는 대로 회화, 조각, 사진, 설치미술과 같은 주류 예술이 아니라 보다 장르 및 매체 실험적인 영상설치나 아티스트북 형태의 독립출판 외에도 퍼포먼스 등의 다원예술에 대한 관심 또한 포괄하게 된다. 그 결과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이나 제도 설계 및 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지원 대상에 창작자만이 제작자 혹은 프로덕션 주체들도 포함시켜야 하며 사업수행 기간도 1년이 아니라 적어도 2년으로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는 작가들의 영상작업을 위한 오랜 리서치 기간과 프리프로덕션 과정을 고려하면 기획자 혹은 매개자를 위해서 운영되는 사전 리서치 지원 프로그램을 창작자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요인은 창작 지원 범위의 다각화를 위한 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 지원 사업에도 기획자 및 매개자의 사전 리서치 지원 분야가 존재하지만 이는 대부분 전시기획을 위한 사전 연구 작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반해 한국 동시대미술 생태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미술이론 및 비평담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미 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 지원 사업 가운데 <창작산실 비평지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비평서 출판, 비평 간행물 출간 그리고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행사와 같은 비평 활동의 결과물 생산을 위한 직접 비용만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는 개인 연구자의 순수한 연구 활동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젊은 비평가 인력 양성이나 비평 연구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기관을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술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한다면 <창작산실 비평지원>의 지원대상과 조건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다.

오히려 도록, 잡지, 단행본 등의 각종 출판을 전제로 한 미술이론가, 평론가들의 연구 작업과 아울러 이러한 국내 텍스트의 외국어 번역 또는 해외 이론가들의 연구 서적들의 한국어 번역도 창작 지원 사업 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켜야한다. 오늘의 시각예술 창작이 제작 및 유통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이론적 연구와 비평적 매개 역시 창작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국내 시각예술 작업들의 예술가치 형성에 기여하는 이런 연구와 매개 작업이 없다면 미술시장이 홀로 견인하는 시장가치는 오래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네 번째 요인은 예술위원회의 조직과 위상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다. 창작 지원제도 개선이란 의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 내부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 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위상 강화라는 현안과 결부되어 있다.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어떤 논의도 과거 블랙리스트의 아픈 경험을 환기해보면 조직과 위상 변화가 먼저 당위적으로 획득된 이후 가능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만약 기금 고갈로 인한 재정 압박 상황 하에 재원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 사업비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면 전문성 확보와 독립성 강화는 이미 강 건너 저편의 얘기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양측의 대대적 개혁 없이는 어떤 새로운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성공적인 제도 운영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선결 과제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발제자 혼자만의 요청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 계신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력에 의해 이런 과제가 조금씩 성취되어 나가리라는 최소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금부터 창작지원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 한다.

2. 책임심의위원 제도 운영을 위한 지향점과 개선 방향

앞선 발제문 〈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제도 변천과 현황〉의 핵심 요지는 심의위원 선정 방식이다. 모든 문화예술 기관들이 그렇듯 예술지원 기관의 중심은 인력 구성이다. 권력과 자본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적 삶의 인간적 조건을 꿈꾸며 예술가는 창작하고 기획자, 매개자는 그 예술적 제안을 시민들에게 공유, 확산시키는 일이 본연의 소명 아니겠는가?

지난 10년간의 지원심의제도 변천을 보면 심의위원풀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선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거의 모든 중점이 놓여있다. 한마디로 절차적 공정성이란 명분 아래 절차적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권 독점을 가능한 방지하기 위해 권한의 분산이나 상호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바른 심의제도는 지원의 수혜자인 예술가와 시민의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공정성의 기치 아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애 쓴 흔적은 엿보이나 이는 심의제도와 관련된 ‘책임 있는 행정’의 본분을 다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2009년 예술위원회가 주관·주최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개선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면 책임심의관, 책임심의위원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2010-2016년 책임심의위원제를 도입하여 운영한 성과를 살펴보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책임 있는 행정’은 행정 기관의 슬로건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공공 행정 분야 내부에서 ‘책임’이란 단어는 기피 용어이거나 혹은 금기시된 표현이다. 그렇다면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 책임심의위원제는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 앞서 언급한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획기적인 조직 혁신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어떤 제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이나 최대한 기능적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려한다.

- 기존의 책임심의위원 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여전히 책임심의위원제의 본질적 문제를 벗어나 심의위원 선출 방식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여러 프로세스 조율에 자원을 허비한 절차적 행정의 실패에 기인한다. 책임심의위원의 선정과 임명을 위한 기준은 전문성이다. 토목엔지니어, 의사, 법조인, 언론인, 교수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은 전문성이다. 마찬가지로 인사권이 위임되고 보장되어 있는 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들은 그런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그에 해당하는 직분을 맡기면 되는 것이다. 책임심의위원 후보군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작업은 위원회 사무처 내부의 연구인력 주도하에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절차에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과 과도한 관심의 표명이라 생각된다.

- 책임을 다하는 심의위원제도 구성과 운영방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체계가 좀 더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무처 내부 전문가를 책임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내부 연구 인력 가운데 예술 현장에 익숙한 평론가, 기획자 또는 예술 교육 기관 출신이 없다면 외부에서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여 충원해야 한다. 정규직, 한시계약직 등 고용형태에 대한 세부적 조건은 여기서 논외로 하고 적어도 상근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원 사업 현장에 나가 실사와 기초 평가를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사무처 내부에 상근하는 심의위원의 역할은 막중하다. 비록 감독의 기능까지 부여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정관(supervisor) 역할은 기대할 만하다. 이들의 업무 범위와 권한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교육청이나 교육지청 또는 교육위원회의 장학사, 장학관의 기능과 역할을 참조해도 좋을 것이다.

- 책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가 4:2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심의위원의 임기에 대한 문제이다. 문자 그대로 책임은 1회성 사업심의를 통해서만 참여자가 자각하기도 어렵고 그들에게 묻기도 불가능하다. 1년에 한번 있는 정기공모 지원사업심의를 위해 참여하는 정도로는 책임심의위원 직분에 적당치 않다. 기존 책임심의위원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상시 심의위원제를 추가함으로써 정기공모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예외적 프로젝트나 창작 사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다. 상시 지원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업 진

행 일정상 도저히 매해 연말에 진행되는 공모 제출 마감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우수 사업계획들을 구제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외에도 국제 교류사업의 경우 해외 문화예술기관 및 지원기관의 사업회계연도가 매해 9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6월에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시 지원심의의 필요성은 절감된다. 그밖에도 기금지원을 탄력적 운영을 위해 영국의 Arts Council England나 프랑스의 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과 같은 예술지원기관들은 상시지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책임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이 아니라 2년 혹은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정하게 지속된 임기가 보장되고 심층적 평가와 숙의구조에 의거한 심사결정이 가능하다. 책임심의와 집중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임기를 최소 2년 혹은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2년이나 3년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 ‘책임’의 연대와 보증을 예술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들의 임기에 맞춰 그들과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비롯한다.

- 책임지원심의제의 성공적인 운영은 책임심의위원의 채용방식, 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들의 임기 보장만으로 성취될 수 없다. 공정성은 심의제도와 심의 방식에서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공정하게 공모 신청기회를 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업공고가 나간 이후 사업신청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필요한 장치이나 사전에 위원회와 사무처에서 지원 영역분야와 지원금 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정치하게 설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원 영역분야의 범주를 무한히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각 분야의 범주 내부에 보다 상세한 하위범주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 공고가 나간 이후 단지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정도로 공모 신청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신청자의 적격 여부와 공모신청 지원 금액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있어야 한다. 공모 신청자가 이런 기준에 근거한 예산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심의위원도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성을 바탕으로 집중심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부분은 창작지원 심의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 그리고 예술의 수월성 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공개 토론의 이슈로 삼기에는 거북한 측면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성과 다양성은 공공지원 정책으로서 기금지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심의제도, 예산분배 그리고 각종 공모 프로그램 설계와 같은 공적 수단과 결부되는 문제이지만 예술의 수월성 문제는 심의위원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심의과정 내부의 토론에서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론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다 해도 논의의 관점을 좁혀 심의 절차와 과정에서 공정성과 다양성 그리고 예술의 수월성이 상반된 가치로서 충돌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 볼만하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절차적 공정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형식주의에 함몰되어 우수한 공모사업을 선별해 내는 내용의 측면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적 공정성이 아니라 심의위원 자신이 공모지원 사업 각자의 수월성 판단에 수반되어야 하는 공정성은 위원 개인의 직업윤리 의식이나 청렴성 등 자기관리의 영역이 기본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그 외의 예술적 우수성에 대한 독자적 판단은 궁극적으로 위원 각자의 전문성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관급 공사에 대한 입찰 심사나 용역사 선정을 위한 심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여부는 창작지원을 위한 심의 과정에 적용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공정성과 다양성 그리고 예술 수월성은 상반되는 가치 체계라기보다는 책임심의회와 집중심의회 실천양식에 준하여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과 심의위원들 간의 숙의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매사안마다 달리 조화롭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적지 않은 경우 지원심의를 위한 가치 판단의 지표들은 상당히 복잡적이기도 하고 다면적이기도 해서 정량적 판단 근거들에 가중치를 달리해서 위원 각자가 채산함으로써 심의제의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쉬우리라 여겨진다.

제1주제

소수의 심의위원을 통한 지원심의제도에서 공유형 지원심의제도로의 전환을 위하여

박장렬 (연출가, 서울문화재단 이사)

현재의 심의제도는 일반적으로 주최 측이 제공하는 서류를 통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소수의 심의위원들에 의해 선정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마치 1등을 뽑아야 하는 경연제도와 같은 형식이다. 이러한 경연식 심의제도는 현장의 예술가들을 서로가 경쟁해야 하는 경쟁자로 규정하게 된다. 심의제도는 경쟁을 위한 경쟁이 아닌 창조와 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심의제도는 서로가 어떠한 작품을 신청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제도이기에 공유가 불가능하다. 심의위원들은 동시대의 예술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술적 경향이 어떠한지를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알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공모신청자들은 서로를 알지도, 동시대의 예술적 경향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은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심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 년에 한 번씩 모든 현장의 예술가가 꼭 치루어야 하는 공모를 소수의 심의위원들만이 정보를 독점하는 심의제도에서 동시대의 예술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폭넓은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심의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의제도가 동시대 예술가들의 정보 공유의 장이자 네트워크의 장이 되어야한다. 현재의 경연식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공유식 심의제도를 제안한다.

먼저 현재의 심의제도를 들여다보고 ‘공유형 심의제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현재의 소수가 결정하는 지원심의제도의 내용

(1) 공모

- 공모 기간을 통한 서류 접수
- 서류는 기본적으로 공통양식과 자유양식을 함께 사용함.

(2) 서류 확인 절차를 통한 1차 심의

- 주최 측에서 서류의 결격사유를 체크함.(블라인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음)
- 평균적으로 분야별 심의위원들을 3인에서 5인으로 선정하여 심사함.
- 심의위원 선정은 추천이나 심사표를 통해 선정함.

(3) 인터뷰

- 1차 심의위원 또는 재선정 심의위원
- 평균적으로 팀당 10분에서 15분정도의 시간을 배정함.

(4) 실연 심사

- 보통의 경우 배수로 1차 합격자를 선정 후 짧은 시연회를 통해 선정함.
(실연심사 없이 지원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서류, 인터뷰 심의위원과 동일하거나 추가 실연 심의위원이 참가하기도 함.

(5) 지원 결정

- 심의위원들이 토론 또는 점수를 통하여 선정함.
- 심의위원들의 명단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 됨.
(단체에 따라 심의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위와 같이 현재까지의 심의제도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한다. 서류만으로 심의를 하는 제도는 심의위원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심의위원 중 공모에 참가한 현장예술가를 배제해야 함으로 심의위원들 선정에 한계성을 갖게 된다. 이는 심사의 다양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함과 동시에 공정성·객관성·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2. 공유형 지원심의제도의 내용

(1) 공모

- 공모 기간을 통한 서류 접수.
- 서류는 기본적으로 공통양식과 자유양식을 함께 사용함.

(2) 서류 확인 절차를 통한 1차 심의

- 주최 측에서 서류의 결격사유를 체크함.
- 심의위원 선정은 추천이나 심사표를 통해 선정함.
(정창호 연구원이 보고한 2017년 심의위원 선정 방식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함)
-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1차 선정자를 3배수로 정함.

(3) 공개형 PT와 인터뷰

- 1차 선정자들이 모두 모여 실시하는 공개형 PT와 인터뷰를 실시함.
- 팀당 10분 내외의 PT를 함.
-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형식의 인터뷰를 실시함.
- PT 참가자들은 자신의 점수를 제외하고 점수를 기록함.
(이 점수는 3.5단계에서 70% 내외로 반영됨)
- 인터뷰를 통해 공모신청자들은 동시대 예술가들의 다양성을 경험함. 아울러 서로가 서로를 연계하는 심리적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되고 이는 현장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직접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됨.

(4) 실연심사

- 배수를 정하여 짧은 시연회를 통해 선정함.
(공유형 심의제도에서는 공개형 PT와 인터뷰를 통한 다수가 검증하는 과정이 있기에 실연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 서류 심의위원과 동일하거나 추가 실연심의위원이 참가하기도 함.

(5) 지원결정

- 3단계의 공개형 PT와 인터뷰 점수가 70% 반영, 실연심사의 점수와 서류심사 점수를

30% 반영하여 결정함.

- 모든 심의과정과 점수는 공개되어야 함. 이는 심의제도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끝으로, 예술계의 주인은 현장 예술가여야 한다.

현장의 예술가들은 각자의 작품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동시대 예술가들의 예술관과 작품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거나 제한된 구조이다. 서울이 아닌 전국을 상대로 생각해보면 서로를 알지 못함은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현장 생태계는 수많은 집단들과 개인들의 예술세계와 다양한 집단과 창작자들의 층위를 지니고 있다. 현재의 소수가 선정하는 심의제도로는 현장의 예술가들을 심사하고 선정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거나 다양성과 공정성의 미확보라는 문제점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소수 전문가의 입장과 의견에 현장을 맡기는 심의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위에 제안한 ‘공유형 지원심의제도’만이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예술가가 서로에게 영감을 받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회를 제공받는 심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의제도의 근본은 일등을 뽑기 위함이 아니라 생각을 공유하고 건강한 네트워크를 위한 기회의 제공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의제도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강화는 많은 현장 예술가들이 심의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지원제도는 공유를 통한 현장의 다양성과 건강성 회복에 기본을 두고 설계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심의제도개선을위한

예술현장 대토론회

제1부 발제

〈제2주제〉

수월성 제고를 위한 창작지원심의제도

강경석 (문학평론가, 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정인석 (제작자, 한국프로듀서협회 회장)

A R T S
COUNCIL
K O R E A

제2주제

예술지원사업, 문제는 철학이다 - 문학분야 지원사업 선정심의와 시민참여

강경석 (문학평론가, 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 [0] 도입 : 발제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술수월성 제고를 위한 창작지원심의제도” 심의위원풀 조성(추천자, 추천방식), 심의위원회 구성(지정제, 추천제) 장단점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
- [1] 그에 앞서 이와 같은 토론회의 필요성을 짚어볼 필요 있음. 공공기관의 기금지원 사업인 만큼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의 제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함.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예술위의 심의제도가 변화해온 과정도 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등에 모종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보아도 되는지? 또는 제도의 수정이 요구될 정도로 지원의 1차적 수혜대상(창작자 등)들로부터 어떤 충분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인지?
- [2] 문학지원의 정의와 목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문학(예술)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앙 또는 지방의 정부부문에 의해 공적으로 조성된 기금 또는 자원(예산, 인력, 인프라)을 활용해 작가 개인 또는 단체의 문학창작활동이나 그 활성화(저변확대 등)를 위한 프로그램이 ‘공공의 심미적 이해’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완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협력’하는 일을 말한다고 잠정 정의할 수 있을 듯. 예의 ‘공공의 심미적 이해’라는 차원은 지금까지 “예술적 수월성의 제고”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통용되어온 것으로 보임.

- [3] [1]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함. 왜냐하면 예술위의 지원심의가 일부의 불신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심의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 (정창호,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의 변천과 현황」 검토)
- [4] 오히려 문제는 “예술인의 자격”과 “예술적 수월성”이라는 금과옥조처럼 여겨지곤 하는 지원사업의 **철학적 전제에 있는 것으로 보임**. 첫 번째 문제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을 한정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문학인과 비문학인을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지원사업 실무를 맡고 있는 공공부문의 기획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문학은 그래도 등단제도라는 게 있지 않냐’는 말들이 오가곤 한다. 일간지 신춘문예나 문예지 신인상에 당선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 지역의 동인 규모에서 발간하는 문예지까지 합하면 그 수는 너무도 많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활동하는 문인도 이미 상당수다. 따라서 등단의 기준에 단행본 출간 이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언제부터인가 제기되었고 현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편이다. 그렇다면 자비출판은? 원한다면 모두가 문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누구나 문인이 될 수 있는 현실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며 그럴 필요도 명분도 없다. 오히려 문제는 문인과 비문학인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자격요건 심사 등) 지원정책의 일반적 구조 자체에 있는 것이다.
- [5] 두 번째 문제는 예술적 수월성 제고의 내용과 관련해 여러 갈등을 야기한다. 창작활동과 창작활동 아닌 것의 구분 또한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컨대 한 사람의 시인(다른 예술장르들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겠지만)이 시를 쓰는 과정을 상상해보면 금세 깨닫게 된다. 그가 일하고 잠들며 꿈을 꾸거나 심지어 카페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순간들에서조차 창작행위를 완전히 분리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때 ‘예술적 수월성 제고를 위해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말은 누군가에겐 시 쓰기(또는 창작활동 일반)를 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생계 전체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고 실제 의식조사 통계수치로도 그것은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 예산이 요구하는 ‘투명성’의 논리는 예산의 집행내역이 규격화된 회계절차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어 현장의 요구와 모순을 일으키곤 한다. 문학 영역의 경우 대개 발간비(단행본 제작비) 지원으로 예산 지출항목을 한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는 ‘자비출판’의 확대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곤 하는 방안이 사후지원과 간접지원 강화이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 [6] (예산지급을 통한 직접지원이 아닌) 인프라 지원으로서의 간접지원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선도하여 다른 장르로까지 확장된 창작레지던시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문학 분야에선 그 외에 다른 간접지원 방식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편이다. 이 사업은 현장 반응이 나쁘지 않고 대개 지자체 유희시설물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국내외로 확장추세에 있는 것으로 안다.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심사의 공정성 등—현장에서 큰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는 편이다. 문제는 역시 ‘사후지원’이다.
- [7] 사전지원과 사후지원의 구분은 간단히 말해 창작성과물(문학의 경우 출판물)의 완성 전에 지원하느냐 아니면 후에 하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사후지원은 일반적으로 시상(포상)제도와 유사한 경향을 띤다. 기획단계(원고의 초안 또는 일부)를 심사하는 사전 지원의 경우 성과물과 정산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사후지원은 성과물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예술적 가치’를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지원금의 사용 시기와 용처가 상대적으로 덜 제한적인 이점이 있다. 하지만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예산관리 라인이나 감사부서, 의회 등은 이러한 방식을 달가워하지 않는 편—왜냐하면 ‘시민의 혈세’를 책임 있게 집행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이어서 정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출판 기회를 쉽게 얻기 어려운, 가능성 있는 신인들의 진출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미 평판이 어느 정도 형성된 문인들 쪽으로 지원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원심의의 기준에도 잦은 혼선이 찾아온다. 공공부문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작가를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며(그러나 누가 더 어려운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은 심의자료 어디에도 없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성과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곤 한다. 물론 사전지원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무엇을 왜 지원하는가라는 본질적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무엇인가의 본질을 독점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쉽게 결론날 리 없고 오히려 쉽게 결론난다면 그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
- [8] 예술인의 생계를 지원하느냐 소위 예술적 수월성을 고취하느냐, 라는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듯한 두 개의 방향은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사실상 하나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생계지원’을 하더라도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를 따지는 기준은 결국 ‘예술적 수월성’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원을 많이 받은 ‘시인’이 더 좋은 ‘시’를 쓰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예술적 수월성’의 신화가 깨져야 해법의 실마리가 나타

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글의 결론이 될 것인데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위한 자원의 마련이나 집행, 결과물들의 산출과 평가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시민’의 참여다.

[9] 익숙지 않기에 횡당무계한 주장처럼 들릴 여지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예술지원정책과 제도들은 의식했건 하지 않았건 사실상 대의제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도는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고 행정 또는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집행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라는 관념은 전가의 보도처럼 아무데서나 힘을 발휘한다. 누가 최종적인 혹은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쥐느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듯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파문은 그 가장 졸렬한 형태의 발현일 뿐 제도적 수준에서 재발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것은 아니다. 시민들로부터 나온 자원이 창작을 비롯한 심미적 활동의 결과물로서 혹은 혜택으로서 다시 시민들에게로 고루 돌아간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예술지원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쉽게 간과되는 듯하다.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거의 모든 판단을 의존하게 되면 그 소수의 전문가들을 발탁하는 권한을 쥐는 관료들의 횡포는 언제고 재연될 수 있다. 법원에서 이따금 운영하는 시민 배심원제나 공공예술프로젝트 차원의 주민참여 사례 등에서 엿볼 수 있듯 의사결정 참여를 희망하는 다수 시민들의 개입(무작위 추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이 전문가들에 비해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결코 단언할 수 없다.

[10] 문단이나 출판계 혹은 ‘문학시장’이라는 민간 영역의 생태계 각 부문과 공공부문의 지원 사이에는 일정한 공유지점 못지않은 긴장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문단에서의 평가와 시장에서의 반응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공공부문의 지원영역이 문단의 평가를 그대로 반복 반영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시장을 추수할 이유는 없다. 단순히 말해 문단과 출판계가 ‘생산자 사회’라면 문학시장은 ‘소비자 사회’이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지원정책에서 의사결정의 핵심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 결론은 간단하다.

[11] 그러나 지금 공공부문의 지원정책에서 의사결정의 주체는 사실상 관료사회이거나 그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결국은 문단인사들) 그룹이다. 전문가와 관료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의 확대와 의사결정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통해 말의 바른 의미에서 명실상부한 공공부문 예술지원정책이 되도록 하자는 뜻이다.

- [12]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잘 알려진 개념이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다. 블랙리스트 파문은 지원도 안 하면서 간섭만 늘린 결과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구태와 적폐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지만 기초와 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일은 부지기수다. 단체장의 성향과 친분관계에 따라 정책은 늘 요동친다. 현행의 제도적 관성 가운데 '간섭'을 차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 [13] 공공 지원제도 차원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풀어야할 구체적인 숙제들을 몇 가지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 그중 관련 예산과 집행권한의 지역 배분은 선결과제의 하나다. 공동체의 단위가 크면 클수록 제도와 절차의 운용은 효율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고 '참여'의 효능감도 감소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무용론과 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답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할조정을 의미한다. 지역문화, 더 좁게는 지역문학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안정된 창작활동을 위해 반드시 지역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물론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다)
- [14] 중앙이든 지역이든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좌충우돌하는 예술지원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앞서 예시한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장르 간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 구조도 있겠다) 그 해결의 출발점은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발상의 전환에 있다. 이때 전문가와 관료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웹진 <창비주간논평>(2017.09.27.)

‘블랙리스트’ 근절과 예술지원정책의 전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더욱 뜨거워진 사실이지만 문화예술 분야 정부지원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과 최근의 적폐 들은 촛불시민의 관점에서 재점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근절 대책을 압박하는 힘 또한 촛불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출범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성패도 이 점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느냐에 달렸음은 물론이다.

지원주체와 수혜자 사이의 단단한 갑을관계

지난 21일, 조사위 주최의 분야별 현장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문학 분야였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문학 지원정책들이 안고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성토되었지만 초점은 예상대로 블랙리스트 파문에 집중되었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해 공적으로 조성된 자원(예산, 인력,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지원은, 예술가 개인 또는 단체의 창작활동이나 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공공적 가치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완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협력’하는 일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엔 그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도 모종의 갑을관계가 성립되기 마련이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은데 자원은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파문의 핵심도 박근혜정권이 문화예술계 장악을 위해 이러한 ‘갑’의 조건을 반헌법적이고 후안무치한 수준으로 휘둘렀다는 데 있다.

그러나 피해사례를 낱알이 밝히고 관련자를 찾아내 처벌하거나 으레 그래온 것처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땀질식 제도개선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대략 참여정부 시기부터는 예술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 같은 민간 전문기구들이 지원 실무를 집행하고 있는 추세여서 어느 정도 풍토가 개선되긴 했지만 지원주체와 수혜자 사이의 갑을관계는 여전히 단단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주는 쪽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하느라 지원금 정산 등을 빌미로 간섭 아닌 간섭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받는 쪽은 문화예술의 진흥이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굴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요령껏’ 활용하기만 한다면 ‘합법적 블랙리스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도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시민에게 권한을 되돌려줘야 하는 이유

혹자는 실무를 담당하는 민간전문기구들의 독립성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기관대표의 인사권과 사업예산의 배분 권한이 정치권력과 관료사회에 있는 한 그것은 ‘권력’의 양식에 호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는 블랙리스트 파문과 같은 역진 사례의 재발 가능성이 불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원금의 배분과 지원여부의 결정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작게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해당지역 주민들 중 추천을 통해 선발된 다수가 공개로 진행되는 심의에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있고 더 크게는 이미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화예술 전문기구들의 사업 관련 주요 결정들에 시민들이 직접 관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예산의 지역 이관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의 책임자와 실무자 들은 기획자이자 조력자로서,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식견을 기탄없이 피력하는 자문역으로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참조할 만한 일부 사례들에 비춰볼 때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리는 ‘고뇌에 찬’ 결단에 비해 일반시민들의 그것이 결코 뒤떨어지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어느 면에선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근본정신에도 이것이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지원실무를 담당하는 정부나 민간기구의 권한과 자원은 본래 시민으로부터 나왔으며 지원을 통한 예술적 성과의 최종수혜자도 결국 시민이기 때문이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원칙적으로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자들일 뿐이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화된 갑을관계는 여기서 설 자리를 잃게 될 여지가 충분하다.

제도화된 참여, 문화예술지원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지난 겨울과 봄을 수놓은 촛불의 물결이 일종의 문화제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돌이켜보면 2000년대 이후의 광장문화 전체가 그랬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시민들의 일상적 문화열은 시장에서의 대중문화 소비와 무관하지 않지만 그와 끝내 일치되진 않고 시장에서 실패한 ‘순수예술’과 무관한 듯 보이면서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듯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시장실패의 보전책이 되긴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지역)대표콘텐츠 만들기’식의 ‘선택과 집중’에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실패의 문제를 시장주의적 발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면 예술인 대상의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불과해진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그 절묘한

중간지대, 아니 독자적 제3지대에 한 나라의 문화와 예술의 수준을 뒷받침할 공공적 거점을 세우는 일은 시민참여의 제도화라는 이토록 작은 전환에서 비로소 새로운 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제2주제

예술현장의 비전을 제시할 지원제도와 심의방안 모색

정인석 (제작자, 한국프로듀서협회 회장)

- 예술지원제도와 심의방안이 꾸준히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방안으로 실행해오면서 이미 각 방안의 장점과 단점이 파악되어 있음
-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으면서 지원심의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
- 지원심의에 있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뒷받침할 심의기준, 심사위원선정, 심사방식, 사후평가 등의 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원제도의 비전과 목표설정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현장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 심의위원과 문화예술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문제 발생 시 정확한 문제파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1. 정부의 비전이 반영된 명확한 심의기준 마련

- 예술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비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어 지원정책의 뚜렷한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

- 비전이 제시되면 거기에 맞춘 지원사업의 방향과 심의 판단기준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수순이 마련될 것
-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지원사업의 최종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고,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예술작품이 완성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사후평가도 이루어져야 됨
 - 지원받은 단체의 결과보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원사업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한 결과를 도출했는지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
- 심사의 공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 시 정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해야하는 항목별 점수인데 경우에 따라 애매한 경우가 발생
 - 예) 우수공연사업과 레퍼토리사업의 평가항목이 동일함. 지원사업에 따른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질 있도록 평가기준이 세세하게 검토되어야 함
- 동일한 지원사업의 심사결과와 심사평이 매번 다른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문제 발생을 개선할 대책 필요
 - 예) 대관료 지원사업
- 지원선정 후 사업수행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지원사업의 목표에 부합하게 성과를 이룬 평가를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함
 - 해당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활용
 - 예) 연극, 뮤지컬 레퍼토리 지원사업의 경우 재공연에 해당하며 이는 지원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비교적 뚜렷한 바 사업실행 종료 후 목표달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용이함

2.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꿰뚫는 전문성이 우선시 되는 심사위원 풀 구성

- 공개추천의 대상과 범위가 투명하고 다양한 것은 좋은 방안이며 대신 추천이유가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함
 - 추천 시 추천사유를 제시할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맞는 추천근거를 추천자가 설명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
 - 추천하는 대상은 현장을 대변하는 각 협회와 현장예술인 개인의 추천을 병행하고, 심의위원 풀의 최종결정은 문화예술위원회에게 일임
- 추천받은 심의위원 풀을 확정할 시 보다 정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심의 시 다각적인 평가가 가능한 심의위원 구성을 위해 다양한 세부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해당분야 경력 평가 시 최근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연극 (뮤지컬) 분야의 경우 최근 2-3년 간 현장에서의 작품활동을 기준으로 참여편수, 관객객평가, 전문가 및 언론평가, 수상 등 실적과 결과를 세부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고른 분배를 고려해야하나 기계적인 비율보다는 장르의 특성에 맞는 유연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무용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음악의 경우 클래식분야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 수 있는 점을 감안)

3. 심의위원, 문화예술위원의 권한 및 책임 부여

- 심의위원 후보 선정방식은 분야별로 일률적이지 않고 각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문화예술위원회에게 전권을 부여
 - 최근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미루어보듯이 지원심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늘 불분명 함
 - 확실한 권한과 함께 책임도 정확하게 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마련이 가장 중요한 핵심
 - 심의위원 선정은 2017년 시행한 무작위 추첨방식은 지양하고 해당분야 문화예술위원

이 책임감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함

- 심의위원 혹은 심의위원 후보에 선정되면 오리엔테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 정부 예술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이해를 인식시키고 정확한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과 세부심의기준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심의결과 발표 시 심사평을 통해 심사과정을 설명하는데서 확대해, 필요 시 심사위원 별 각 항목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평가점수를 공개하면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고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음
 -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면 외부로 부터의 청탁에 의한 왜곡된 평가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됨

4. 지원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 차단방안 마련해야할 과제

- 부정한 심의의 원인은 외부압력과 청탁
 - 심의기피제도를 통해 심의위원과 개인적으로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외부청탁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문제 발생 시 심의위원 개인의 비위로 적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심의과정의 투명한 공개, 문제발생 시 강력한 조사 및 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근절해야 함
 - 외부압력은 주로 정치인들이 위원회 임직원에게 행사하는 경우인데, 상대적 약자인 위원회 구성원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선무
- 지원심의와 관련하여 문제발생 시 조사, 제재, 처벌 등 관련 조항을 법적근거로 마련해야 함
- 정부가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팔길이 원칙을 실행할 의지를 보여야 함

- 블랙리스트 사건은 권력의 심의개입이 청탁의 수준을 벗어나 압력으로 작용한 것임
- 지원대상에 대한 정치권력의 청탁은 이전에도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청탁 자체를 차단하고 이를 거부할 시 벌어질 보복에 대한 변변한 장치가 없음

지원심의제도개선을위한

예술현장 대토론회

제2부 토론 및 질의응답

〈패널 토론〉

공정성·다양성 vs 수월성

김성규 (시인, 도서출판 걷는사람 대표)
김종길 (미술평론가, 경기문화재단 문화산업팀장)
김종선 (한국민예총 조직정책위원장)
송인현 (연출가, 극단 민들레 대표)
오세곤 (연출가, 순천향대학교 연극무용학과 교수)
이철구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장지영 (기자, 국민일보 차장)

A R T S
COUNCIL
K O R E A

토론

심의제도의 유형과 그에 따른 공정성 문제

김성규 (시인, 도서출판 걷는사람 대표)

심의위원 제도의 역사는 공공기관의 기금지원 사업인 만큼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제까지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그 이전에 지원금 심의제도를 보면 수혜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여러 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 예술가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석에서 기금 운영과 지원금 심의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한때 시행되었던 단체 추천의 경우가 그런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추천받는 경우에는 단체들의 추천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입니다. 저 또한 단체에서 활동을 해보았지만 단체 이기주의가 존재할 수 있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작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회원 수에 따라 지분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설 경우가 많습니다.

박장렬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수의 심의위원을 통한 지원심의제도에서 공유형 지원심의제도로의 전환을 위하여”의 내용을 보면 ‘공개형 PT와 인터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선정자들이 모두 모여 실시하는 공개형 PT와 인터뷰를 실시함. 팀당 10분 내외의 PT를 함.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형식의 인터뷰를 실시함” 등의 내용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드는데 써야할 에너지를 심사 받는 과정에 지나치게 사용하는 2차 노동행위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공적인 장소가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는 심사자와 수혜자가 평등한 관계를 지니고 있

기 때문에 대면 인터뷰가 둘 모두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자 또한 대면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심사위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그럴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섭외해야 합니다. 문학의 경우 그렇게 되면 문학적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T 참가자들 또한 얼굴을 대면하고 토론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작가들에게는 상당한 고욕입니다. 지원금 수혜를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 예술가들을 대면하며 경쟁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감정과 욕망의 적나라함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경석 선생님의 말씀처럼 1차적 수혜대상(창작자 등)들과 심사위원과의 관계는 갑을 관계로 형성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심사위원의 성향과 인간관계로 인해 지원 선정자가 바뀌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소수이 전문가와 그를 선정하는 관료들의 횡포 또한 존재합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대안으로 말씀하신 ‘시민’의 참여제도를 시행한다면 아직 예술분야에 많이 적용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지원금 제도는 문학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작품을 홍보하고 수용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며 또한 그런 작품들을 생산하는 작가들에 대한 복지에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엘리트주의라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작품에 대해 시민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중적으로 환영받는 작품들이 심사에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참여제도를 위해서는 심사위원이 되어야 할 시민들을 선발해야 하는데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 누구나 심사위원에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가진 시민들만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과욕에서 작가들이나 출판사에서 주변사람들에게 시민참여제도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민참여제도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방식이지만 시민들이 심사위원이 아닌 감시자 기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인력풀을 만드는 과정이 폐쇄적인데 그것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를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정자격을 가진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의 권한을 주고 시민 참관인제도를 시행한다면 그것이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 론

예술의 공진화를 위한 변혁

김종길 (미술평론가, 경기문화재단 문화산업팀장)

1. 지금 여기, 예술(지원)정책의 현주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의 위상과 역할은 불과 수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광역과 기초 단위의 문화재단 설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광역문화재단협의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탄생했다. 경기도는 광역과 기초 간의 협치를 위해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를 구성했다. 지원과 진흥의 논의구조가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을 제시했다. 시대정신은 자치와 분권으로 향한다. 그렇다면 문예정책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최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201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 문화기본법(2017) 등은 그 기본 취지가 이미 문화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화국가’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모범으로 탄생한 ‘예술위’의 역할은 이렇듯 큰 변화의 시대에 맞는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법과의 관계설정을 위해 ‘문화’를 떼어내고 ‘예술진흥법’으로의 완전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한국예술위원회’로 바뀌어야 한다. 예술정책과 예술진흥을 위한 전문기구로 재탄생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정책실도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으로 나

누엇듯이, 법-정책-수행구조의 변화에 따른 예술위의 역할과 위상이 예술정책에 집중되어야 한다. 지역의 (광역)문화재단들은 지역문화정책을 따르되, 예술지원의 구조를 갖는 한에서 예술위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

예술위-(광역)문화재단이 수행하게 될 예술정책과 예술지원의 큰 틀은 국가-지방(지역)의 역할 구분을 얼마나 정치하게 배려하고 수렴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직접지원, 간접지원은 물론이요, 새로운 예술정책을 위한 쉽 없는 토론, 지원 선정된 사업의 후속지원(기획자 요청 시 자문·컨설팅·협찬 등등), 결과 공유 워크숍, 평론, 확장을 위한 번역... 예술위는 지원기구에서 예술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창조적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공부는 2003년 9월부터 예술국이 중심이 되어 예술정책 담당자와 장르별 현장예술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예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국가의 총체적 예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이 작업의 결실은 2004년 6월 8일, '창의성'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수립한 21세기의 문화비전 <창의한국>과 문광부가 발표한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약칭 <새예술정책>)이란 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빛을 보게 됨. 이 계획서는 우리 정부가 예술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최초의 시도로 기록될 것임. 우리 예술행정의 역량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인식수준을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함.

문재인 정부는, 과거 <새예술정책>처럼 빠르게 '새 예술정책 수립 TF'를 가동했으나,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서두르지?" 하는 의구심이 크다. 14~15년 전의 정책이 낡은 것일 수도 있다. 그동안, 법제도의 변화도 많았고, 정책 환경의 변화도 작지 않았다. 그러나 예술의 본질적인 논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예술정책을 위한 새로운 논의는 <새예술정책>과 그 이후의 정책들, 연구보고서, 예술현장 등을 테이블에 올려서 불을 지펴야 한다. 큰 틀에서는 사실 그 토론의 결과를 놓고 지원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2. 지원정책의 개선보다 우선하는 것은 '책임행정'이다!

정창호 책임연구원의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정독하면서 느낀 것은 심의제도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의 지원

심의제도가 당대 문화(예술)정책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개추천’과 ‘무작위 추천방식’, ‘옴부즈만 제도’는 일견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예술계의 속성상 심의위원 후보자를 공개추천하는 방식은 ‘협회/단체’가 나설 확률이 높고, 세부 분야별 무작위 5배수 심의위원 구성도 나이브해보이며, 옴부즈맨 제도도 누구를 옴부즈만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는 문제소지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방식은, 나쁘게 해석할 때, ‘예술위’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장치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예술위’의 전문성 따위는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된다. 왜 이래야 할까? 예술계가 블랙리스트의 현실에서 ‘예술위’를 비판한 것은 ‘책임행정’을 하지 않았단 것에서 기인한다. 위원장조차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심지어 나는 차라리 ‘저항행정’이라 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니 심지어 침묵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따위의 ‘적폐’를 실천했던 것을 문제삼았다. 지난 정권에서 책임심의위원회제도가 악용되거나 무용지물이어서 폐기처분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닌, ‘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은 ‘책임 있는 예술행정’을 요구한다. 예술이 스스로를 변신하며 새로운 사건들을 기획할 때 새롭듯이, 예술행정은 그런 예술의 변신과 기획을 두려움 없이 지원해야 한다. 이때 ‘지원’을 해야 하는 예술위는 국가정책과 충돌할 수 있고, 현실정치와도 맞서야 할지 모른다. 예술의 수월성은 때때로 국가정책과 정치는 물론, 삶의 가치 따위와도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과정을 뜯어고치는 지원정책보다 어찌면 사무처, 위원회, 위원장의 독립성, 자율성을 예술계가 확보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3. **균등분배가 아닌, 선택이며 집중이다!**

문예진흥은 예술진흥과 지역문화진흥으로 분화했다. 예술진흥의 핵심은 균등분배가 아니다. 선택과 집중이어야 한다. ‘예술위’는 (광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정책과 달리 좀 더 밀도 높은 지원정책으로 집중해서 예술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므로 심의위원 구성과 운영도 매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것은 다시 말해 ‘예술위’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문제일 것이다.

책임심의위원제를 유지하되, 심의위원 구성은 사무처 내의 추천과정과 공개추천을 병행하고, 이를 다시 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술위’의 정책과 철학은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위원 구성에서 드러날 수 있다. 심의제도는 예술정책이 수행되는 가장 직접적인 현장제도이기 때문에 책임심의위원은 일정기간(2~3년)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예술가인가? 위대한 창조적 개인인가?

예술정책은 예술의 수월성 제고를 최우선의 추진과제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예술정책에서 예술의 수월성을 논의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국가가 심의 평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예술위’의 위상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예술의 수월성을 고민하면서 드는 생각은 예술지원의 대상이 ‘예술가인가?’ 아니면 ‘창조적 개인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수월성은 ‘효과성’(effectiveness)과 ‘탁월성’(excellence arete)의 두 측면을 갖는다. 예술지원정책에서 수월성은 지원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극대화된 ‘효과성’일 터이고, 예술가나 기획자에게는 창의적인 ‘탁월성’일 것이다. 그러나 그 둘은 다른 게 아니다. 그 둘이 하나의 창조성으로 발현될 때 예술은 사건이 되고 변화의 중심에 선다.

그렇다면 그 예술의 수월성을 발현시키는 기획은 누가 하는가? 기존의 예술가일까? 아니면 창조적 개인의 출현일까? 예술사에서 그야말로 예술사적 사건이 되는 기획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기존의 예술가들이었을까? 아니면 예술가이기 이전의 창조적 개인이었을까? 예술가의 탄생일까? 예술가가 기획하는 사업계획서일까.

자, 이런 의문을 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술위’가 예술가들만의 플랫폼이 아니라 사건을 기획할 수 있는 다양한 창조적 주체들을 위한 열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의 명분은 ‘사업계획서’에 있을 터이지만, 그 사업계획이라는 것도 그래서 새로운 예술정책의 구조에서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 예술이 사업이 되는 곳은 시장에서다. ‘예술위’가 시장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사업계획서’는 각 분야/장르별 특성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플랫폼에서 ‘기획’은, ‘사건’은, 던져져야 한다.

지금의 ‘예술위’는 새로운 예술기획과 사건들이 조장되기에는 지원정책의 구조는 물론,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도 젊지가 않다. 사업의 의제들은 다양해 졌으나, 예술의 수월성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질풍노도하는, 이성의 논리적 구조를 벗어던진, 탈학습의 미학을 궁리하는, 미완의 실패를 조장하는, 허술하고 조악하나 문제적 야심이 만만한, 이러저리 사방팔방 시방으로 터질 것 같은, 그런 기획들을 열기 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원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예술이 뒤섞여서 21세기 새로운 예술의 수월성이 폭발하는 파괴적 예술기획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다. 그 장이 먼저고 지원정책은 그 장이 마련된 뒤에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장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한국 예술이 뒤바뀌고 미래가 열릴 것이다.

토론

예술 지원제도의 근원적 전환 : 예술, 예술가 중심의 국가 예술정책 시스템 구축

김종선 (한국민예총 조직정책위원장)

정부는 왜 예술을 진흥시켜야 하는가.

정부는 왜 예술을 지원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지금 시점에서 진지하게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예술의 관계는 무엇인가. 현행 헌법(현재 개정이 논의 중이며, 개정 과정에서 문화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에서 말하고 있는 정부의 의무인 민족문화의 진흥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짚어 봐야할 필요가 있다. 봉건의 시대였던 조선과 일제 식민지 시대를 논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이후 예술은 오랫동안 과연 진흥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왔는지,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블랙리스트를 통한 새로운 검열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많은 부분에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결국 오늘의 토론회가 단지 예술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한 창작지원제도의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술의 수월성 제고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보다 근원적인 고민에 대한 답을 같이 내야만 지금 시기 예술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구조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원적인 물음부터 해야 한다. 정부가 왜 예술을 진흥시켜야 하는가? 예술가와 예술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 상호간 구조의 상관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술 진흥을 위한 올바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 정부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예술 역시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가치를 지닌 것

이라면 당연히 정부는 진흥의 책무를 지닌다. 이것이 정부와 예술 진흥의 상관관계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내용이 과연 지금까지 잘 지켜져 왔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 역시 개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토론회의 내용은 구체적인 진흥제도 개선의 방법을 묻고 있는데 방향이나 여건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저 단순히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작은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예술의 진흥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예술 진흥 제도는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왜곡의 역사를 가져 왔으며, 결과적으로 과연 현재의 한국에서 예술 진흥은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마저 들게 한다.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보자. 식민지에서 해방 된 이후 정부는 수립되었으나 경제난으로 인하여 국가가 예술의 진흥에 노력을 쏟을 수 없었다고 평가되는 시기가 존재한다. 오랜 군사 독재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는 역시 경제 위주의 국가 운영에 가려 예술은 뒷전 취급을 받았고 국가적인 이슈도 아니었다. 사실 예술에 대하여 정부가 진흥의 의지를 보인 것은 김대중 정부 때가 아마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걸로 판단한다.

그렇다고 사실 정부가 문화, 예술에 대하여 정책을 펴거나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나 예술 정책을 편 이유를 보자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편 것이 아니다. 우민화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정부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문화나 예술을 활용해 온 시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한 관료들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정부 권력의 핵심들이 과연 예술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문화부 역시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와 부역 등의 사건 보다 더한 역사를 스스로 안고 있다. 군사 독재 정권에서 검열 기구였던 것이 바로 문화부와 관련 기관이었다. 그리고 사실 오래지 않은 과거의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잠시 예술 진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많

은 제도적 개혁이 뒤따랐지만,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우선한 한국의 정치 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예술 진흥은 다시 소외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하여 예술 진흥은 역주행을 했고, 블랙리스트와 같은 시대 상황에 따른 검열의 기형아를 낳게 되었다. 오늘의 토론회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의 초보적 예술 진흥의 맹아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블랙리스트로 인해 제기된 문제를 미봉시키기 위하여 예술 진흥 제도의 '다양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한 사소한(?) 방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 역시 아직 박근혜 정권의 산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간 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정부가 임명한 조직이며, 이를 위한 개혁 방안 조차 사실 확실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개악한 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문화예술위원회라 하더라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개혁을 위한 방향성을 확고하게 보인다면 다를 수 있을 것이지만 사실 아직 그러한 비전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의 주제와 상관없이 문화부나 문화예술위원회의 진지한 비전 제시를 기대한다.

새롭게 문화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국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 왔지만, 한류가 활발한 성과를 내어도,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를 능러도 아직 우리는 문화국가라고 할 수 없다. 한류가 성과를 내는데 한국음악은 망가진 채 오랜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영화는 화려한데 문화과 연극은 암울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결국 이 역시 정부의 요란한 자기과시의 한 방편이 아닌가. 한국 영화가 정부의 노력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 또한 아니다. 정부의 지원제도 보다는 영화인들의 열정에 힘입은 바가 크며, 국민들의 사랑에 의한 점이 더욱 크다. 이 역시 일부만의 화려함이지 내부적인 모순 덩어리이다.

근본적으로 문화국가로 가기위해 정부의 체질을, 아니 최소한 문화부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기관 역시 마찬가지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행정 구조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적폐 청산의 근원적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새롭게 문화국가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행정구조에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적폐는 발생한다.

적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의 행정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적폐의 재생산이 언제든지 가능한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새 정부는 촛불 시민들의 행동으로 만들어진 정부다. 적폐 청산의 대안 역시 기존의 행정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가 이뤄져야 달성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주장의 근거들을 함께 생각해 보자.

적폐의 역사적 사례와 국가 행정

한국은 오랜 군사 독재와 재벌과의 유착 등의 암울한 시기를 겪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김없이 공무원을 중심으로 행정력이 움직였다. 박정희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보도지침, 정경유착, 예술의 검열 등을 행한 행정 권력이 있어왔다. 이는 최근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 까지 했다. 적폐인 것이다. 정확하게 행정력에 의한 적폐인 것이다. 블랙리스트의 사례만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 권력이 기존의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활용하여 사전검열의 형식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력인 선출직 행정 권력이 기존의 공무원 행정력을 동원하여 저지른 범죄인 것이다. 여기서 적폐의 원인을 찾기는 쉽다. 부당한 행정 권력을 행사한 정치권력을 찾으면 되니까. 그러나 부당한 행정력을 행사한 공무원의 문제에 이르면 단순한 것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상급자에 대한 복종을 의무화 하고 있고, 상급자의 명령이 불법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행정의 과정에서 부지불식중에 사소한 것처럼 포장된 행정력의 불법적 사례들은 명확한 불법적 사례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연관된 모든 공무원들은 범죄자인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논점을 확대하면 독재시기 공무원은 모두가 독재의 도구이며 공동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 불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던 젊은 청년 전경들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강변한다면 할 말은 없다. 사소한 것이라도 부당하면 저항해야 한다면.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안해

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은 책임을 지는 이가 있으면 사건은 문힐 테고 이는 모든 공직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니 봉합부터 해 왔다. 이러한 관행 역시 적폐 중의 적폐다. 적폐 청산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지금, 특히 시민들에 의해 범죄 정권을 심판한 지금이 근원적인 원인 분석과 개혁적 대안 생산의 최적기임을 알기에 신중하고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한다.

어공이 지배하는 늘공의 행정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을 일컫는 말로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과 이로 인해 정부적으로 임용된 공무원들, 국회의원과 그 보좌직원 등을 주로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한국의 권력의 핵심은 어공이 쥐고 있다. 정권의 교체는 어공의 교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늘공은 ‘늘 공무원’인 행정고시 등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말한다. 실제 국가 행정의 전부는 늘공의 몫이다. 특히 한국은 한번 늘공이면 영원한 늘공의 공화국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행정은 영원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공은 바뀌어도 늘공은 영원하다’는 뜻이다.

한국식 직업 공무원 제도와 같이 탄탄한 구조를 가진 국가는 일본 정도이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국가는 당이라는 별도의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에 있다. 우리는 부처에 달랑 장관과 몇몇 보좌관(장관 보좌관제도 역시 2003년에 생긴 제도로 역사가 짧음)이 어공으로 들어가서 500여명이 넘는 늘공과 일을 한다. 이 끌려갈 뿐이다. 한편 늘공 출신 장관이 오는 부처의 경우는 그냥 늘공 중심일 뿐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한 부처에 국회의원이 일단 5명이 결합하고 그 보좌진들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결합되어 있기에 행정력이 한국만큼 강고하지 않다. 한국은 가히 늘공 공화국이 맞다. 어공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늘공이 지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적폐 청산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욕망을 가진 늘공이 존재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소위 ‘부역 늘공’이 그들이다. 지금의 적폐 청산의 과정에서도 이들 부역 늘공은 반드시 그 역할과 불법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고 강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들은 그나마 남은 늘공의 자존심과 안정성을 뿌리채 흔들어 놓은 공공의 적이다. 대부분의 늘공은 구조적인 문제와 달리 대단히 자부심도 강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아직 건강한 이유 중의 하나다. 특히 박근혜 정권시기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공무원들의 저항과 문제 제기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공의 구조적인 개혁은 이뤄져야 한다.

늘공 구조 개혁이 적폐 청산의 원인 규명과 개혁의 출발

늘공을 분석하면 행정의 전문가와 일상적, 전문적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공공시설의 관리나, 경찰, 소방 등 전문 공무원이 일상적 전문적 공무원이라면, 사무관급이상의 관리직 행정 공무원들은 행정 전문 공무원일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행정을 기획하는 공무원은 전문직 행정 공무원이라 할 것이다. 이 역시 중앙과 지방, 부처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다. 그리고 가끔 개방형 공무원직위가 있어 고위 공무원중에 민간인이 잠시 근무하기도 한다. 문제의 근원은 왜 국가 행정은 늘공 특히 고위 늘공의 전유물이어야 하는가이다. 어공들이 지배하기 쉬운 국가, 즉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같이 어공과 늘공의 결합이 만드는 적폐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승만, 박정희 시절로부터 비대해지고 자리 잡은 늘공 국가를 만들진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행정 경험도 중요하다. 그러하기에 늘공의 존재도 필요하다. 다만 행정이 늘공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해 자체 정화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졌던,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이 늘공과 시민의 공동 행정이 답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 적폐의 청산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인 늘공과 어공의 결합을 막기 위한 늘공의 개방을 확대하여 시민(전문가와 시민 활동가를 비롯한)들이 참여하는 늘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결제 중심의 시스템이 아닌 업무 전담 방식의 책임 행정제 도입 등도 고민되어야 한다. 국가 공무원 구조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장된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

한다. 어공이 늘공의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공 자체의 개혁(이는 정치, 정당의 개혁으로 가능할 것)과 함께 늘공 구조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국 공무원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새 정부 예술진흥 개혁의 방향

이러한 행정 구조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예술진흥에 대한 노력이 같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큰 틀에서 행정 권력의 문제 등 정부와 예술 진흥의 문제를 병행하여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작은 부분의 제도적인 보완으로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모쪼록 단순히 예술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시스템의 개선에 한정하지 말고 사고를 국가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해서 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문화국가의 틀이 만들어 졌으면 한다. 아울러 예술 진흥의 방향에 대한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주요한 몇 가지 지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정부가 우위가 아니라 예술과 예술가가 우위에 서는 예술 행정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헌법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술의 진흥을 필요로 하며, 예술의 진흥은 예술가들을 통하여 이뤄진다. 즉 정부가 예술가들로부터 국가 예술진흥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예술정책은 정부가 예술가를 지원하여 예술을 진흥시키는 것처럼 구조화 되어 왔다. 정부가 갑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갑인 나라는 민주 국가가 아니다. 예술가 역시 국민으로 정부는 국민의 을이어야 한다. 예술 진흥 정책의 중심을 예술가로 두고 정책을 새롭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논의 되는 지원 제도 문제 역시 마찬가지 이다. 예술가가 우선이라면, 심사의 공정성 문제, 다양성 문제의 해결방안을 행정 제도의 개선에서 찾기 보다는 구조적인 모순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술지원제도의 중심인 이유의 핵심은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분배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상 모자라는 예술 진흥 예산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수요에 비하여 모자라니까 권력이 발생하고 이를 모순되게도 행사해 온 것이다. 정부는, 특히 문화부는 예술진흥예산의 확보를 중심으로 더욱 노력하고, 확보된 예산은 예술가들이 장르별로 자율

적으로 나누고, 사용할 곳에 대한 것도 자율적으로 정하고, 부족하나마 당당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 되어온 심사위원의 문제, 절차의 문제는 사실 그 이후의 논의이자 자율적인 합의로 가야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예술 창작 지원은 작품 위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연극의 경우 공공 공연장을 만들어 연극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여 대관료 자체를 없애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방식의 장르적 특성에 따라 예술가들 스스로가 정부가 지원해야 할 내용을 만들고 정부는 이에 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영역을 억지로 분리하여 행정하고 있다.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콘텐츠 산업인지, 예술은 지원체계고 콘텐츠 산업은 투자의 대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인지, 공공재가 되어야 하는 출판은 산업의 영역에서 왜 고군분투해야 하는지. 문화체육관광부 만이라도 부서 간 정부 3.0이 실현되길 희망한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이 어떻게 사소한 협력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그 이유의 핵심이 예술가를 예술 행정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아서 이다. 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과 위원장이 이끌어 가는가. 사실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과 문화부의 상급 기구가 주도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실상 상설화된 정책 자문기구 이상이 아니다.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큰 틀의 방향만을 결정할 뿐이다. 장르별로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최소한 초기의 영화진흥위원회처럼 치열한 장르별 위원회들의 연합체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아니라, 장르별로 진흥의 대상이나 방법이 보다 장르적 특성에 맞게 제안되고 모색되어 스스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으로 역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문화부는 예술가에게 예술진흥의 방법과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부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 구조의 선도적 개혁을 통해 개방형 행정 개혁을 도입해야 한다.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아니라 장르별로 예술가가 국가의 요구를 받아 국민의 행복을 위한 예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말로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하지 말고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이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정부의 개혁은 시스템의 개혁이기 때문이다.

토론

토론문 및 제안서

송인현 (연출가, 극단 민들레 대표)

- 박장렬 연출가의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특히 심사위원이 많이 공부하는 자리라는 것은 박연출가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따뜻한 시선을 고맙게 생각한다. 다만 나-3에서 자신과 경쟁하는 팀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적게 줄 수도 있다. 방안이 있는가?
- 강경석님이 [4]에서 제시한 예는 매우 공감이 되고 특히 구체화된 회계절차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는 회계처리를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5]에서 언급한 간접지원과 창작 레지던시 지원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 정인석님의 글은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① 정부의 정책이 정해지고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식은 자칫 정부의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예술가의 행위가 있고, 이를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거나 예술가들이 **필요한 방향을 건의**하는 방법도 있다. ② 공정성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공정인지, 예술작업에서 공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가령 어떤 작가나 예술단체가 한 해에 5편 이상 신작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현 지원제도는 한 작가나 단체가 한 작품만 신청할 수밖에 없다. 여러 작품이나 프로젝트가 선정되더라도 조정을 한다. 순회공연 등의 경우도 한 단체가 한 작품만 신청할 수 있다. 살아있는 레퍼터리를 여러 작품 보유한 단체나 그렇지 못한 단체나 한 작품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과연 예술가에게 공정이라는 잣대가 가능한 일일까? ③ 예술작품이 완성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술 작품은 독창성을 우선해서 봐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유통까지 예술가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를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④ 정량적, 정성적 평가, 항목별 점수, 목표달성의 정도를 평가 등의 단어가 예술가들의 행위를 얼마나 옥죄는데, 과연 이러한 계량적 평가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까 한다. 정수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수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린다. ⑤ 심사위원 풀 구성 단락에서는 ‘추천하는 대상은 현장을 대변하는 각 협회와 현장예술인 개인의 추천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전체 회원들 행위를 파악하고 지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 박만우님의 견해에 전체적으로 크게 공감한다. 특히 20세기 후반, 정부의 예술 지원을 통해 예술조차 공권력의 행정 대상이 됨으로써 순치되고 마침내 사회에 통합되었다는 지적은 예술 지원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술가를 향한 경종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의 지원심의회 제도 변천을 보면 심의위원풀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선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거의 모든 중점이 놓여 있다. 한마디로 절차적 공정성이란 명분 아래 절차적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권 독점을 가능한 방지하기 위해 권한의 분산이나 상호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바른 심의제도는 지원의 수혜자인 예술가와 시민의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공정성의 기치 아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애쓴 흔적은 엿보이나 이는 심의제도와 관련된 ‘책임 있는 행정’의 본분을 다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

*** 지원제도의 개선이 심사형식의 개선만을 이야기하는 자리인가?**

- 먼저 쉽게 바꾸지 못하는 예술 지원의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지원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술지원정책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프랑스처럼 헌법에 문화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가령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제9조 “국가는 전

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힘써야 하며,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1946년 10월 27일 헌법 전문에 그 권리를 넣고 있다.

11. 국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상태,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 특히 어린이, 부녀자, 노근로자 등에게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건강권, 기초생활권, 휴식권, 그리고 여가를 보장해야 한다.

13. 국가는 어린이나 성인에게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접근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그리고 공공교육기관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후 1990년에 가서 문화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인 ‘문화에 대한 권리’가 등장하면서 오늘날 프랑스 정부가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문화를 ‘모든 개인의 일상 활동’으로 보고 이를 위한 공공문화서비스 개념이 생긴 것이다. 개인의 문화적 취향이나 욕구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만약 이를 개인이 실천하는데 있어서 제약요인이 있다면 국가는 이를 줄여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예술지원은 **독창적인 작업**에 우선하고, 일정기간 이상 **꾸준하게 작업**한 예술가들에게는 특혜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정진하는 예술가들이 나오고 힘든 시간을 인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 제안에서 말하고자 한다.

- 현재의 **장르별 지원 방법**을 계속할 것인가?

장르별 지원으로 현대 예술의 다양성이나 새로운 조류를 담아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호주,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36개월 미만 아가들이 보는 공연 Small Size는 연극과 음악 무용 미술이 그 경중을 따지기 힘들 정도다. 또 미디어 아트라고 있지만 이 미디어를 활용한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등은 영상인가 공연인가?

- 예술가들이 먼저 지원을 청하는 방법은 없는가?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창의성’이다. 이는 기존의 틀에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원 틀만 갖고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아낼 수 없다. 예술

행위가 먼저 있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 새로운 지원제도 제안

1. 포토폴리오지원

예술가들이 자신의 경력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독창성을 본다면 젊은 예술가들이 유리하겠지만 포토폴리오를 통해 오랜 동안 의미 있는 작업을 한 예술가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원로 예술가를 대접할 수 있고, 젊은 예술가들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예술가들을 결산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이론가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 향후 심사위원 풀

각 협회, 예경, 각 문화재단, 많은 극장들에서 잡지를 만들고 있다. 가끔은 꼭 읽어야 할 글을 읽고 있어 어느 것 하나 그냥 버리기 아깝다. 그렇다고 그것들 다 보기도 힘들다. 좋은 글이 사장된다.

우리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조류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개발된 예술작품이 세계 학회나 우수 잡지에 실을 만한 글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은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많은 평론가, 학자, 이론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이 틀을 활용하면 전문 심사위원이 생길 수 있다.

3. 연습, 레지던시 혹은 개발지원

예술가들은 연구하고 실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 제도는 연구를 할 수 없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연구가 없으니 새로운 작업을 하기 힘들고 실패가 없으니 성공도 찾기 힘들다. 작은 실패를, 연습실에서 많은 경험하게 해야 한다. 특별한 연습을 위해서는 특별한 선생을 모셔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계량적 숫자를 적용하기 어렵다. 때로

아주 적은 수의 예술가들만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통이나 어린이**가 그렇다. 이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 실제 그 일을 하려고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방법이 있어야 한다.

연습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피지컬과 전통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이 분야는 며칠만 쉬어도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관심있는 단체에서 작품을 할 때만 훈련하기 때문에 축적된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이를 각 단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젊은 작가들의 여행비도** 지원해야 한다. 글을 책상에서만 쓰는 것이 아닌데, 작가들이 아무리 많은 자료를 모아도 때로는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중견 작가들이라면 출판사나 공연을 기획하는 단체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아이디어만 있고 실천하기 어렵다. 이런 작가들은 실패해도 언젠가는, 때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실천해낸다.

무엇보다 **창작레지던시 작업은 실패가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계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예술가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혜를 공론화**하자.

정부의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요구를 모두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술가도 지원기관, 정부도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원은 곧 특혜**다. 그런데 이 **특혜를 공론화**하면 특혜를 받는 예술가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의무를 갖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할지 모른다. 예술가들에게 공정이라는 이름은 자칫 매뉴얼이 될 수 있다. 예술 작업에서 매뉴얼이 생기는 순간, 예술의 사회 존재 가치가 반감된다. 특혜가 맞다.

토론

예술지원의 기초 전환을 전제로 한 심의제도 개혁 방안

오세곤 (연출가, 순천향대학교 연극무용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평가 역량에 문제가 많다. 특히 근본 목적을 망각한 채 평가를 위한 평가, 즉 순위 매기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심하다. 대학 입시가 그렇고 공무원 채용과 교사 채용이 그렇고 대학 평가가 그렇다. 오로지 몇 등까지 붙이고 몇 등부터 탈락하는지 구분하는 데만 몰두한다.

평가는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기능이 있다. 엉터리 평가는 세상을 망친다. 대학 입시가 우리 청소년들을 삶과 무관한 지식의 노예로 만들고, 대학 평가가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가시적 수치 쌓기에 열중하도록 하고, 공무원 채용 시험이 좋은 공무원과 전혀 상관없는 암기 선수들만을 양산하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 평가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 예술에 대한 평가는 예술 전반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 하다. 특히 지원 심의는 그 민감함 때문이겠지만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며 수십 년을 보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 지표가 필요한 곳에 주관이나 직관을 들이대고 직관적 전문성마저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 또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진다. 심의위원풀이라는 것만 해도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겨우 서너 명을 뽑아 심의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인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술 지원에 대한 심의는 예술 평가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예술적 전문성이 곧 바로 평가 능력은 아니다. 평가의 목적에 맞추어 잘 조직된 평가 방법과 꼭 필요한 평가

자료가 정확하게 제시될 때, 또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비로소 평가자의 예술적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은 단시일에 쌓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평가 역량 부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면 평가’는 그 차선책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평론가 그룹(평론가풀에서 선정된)과 창작자 그룹(창작자풀에서 선정된)으로 이원화된 전문 평가단과 대규모 시민평가단(초대규모 풀에서 선정된)의 평가 결과를 서로 교차시켜 본 뒤 전문가의 직관을 더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될 것이다. 발제 중에 “시민의 참여”와 “공유제” 제안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예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직접 창작 지원이 아닌 평가나 행정 에 들어가는 돈은 낭비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좋은 평가는 세상을 바꾼다.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도 올바른 평가와 적절한 행정 지원은 예술가들이 엉뚱한 일에 힘을 쏟지 않고 창작에 전념하게 해주므로 아까워 할 일이 아니다.

사실 예산 부족은 평가와 행정 등의 축소로 해결할 수 없다. 그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프라는 다른 말로 ‘보편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 지원 또한 낭비로 보는 시각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거의 제로 확률을 무릅쓰는 것이 예술의 속성임을 생각할 때 보편적 지원은 소중한 예술적 실패를 감당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물론 예술적 수월성을 근거로 하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위 가시적 성과를 위한 선택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술 현장 진입자들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인 것이 좋다. 선부른 선택은 그들의 진로를 왜곡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언제든 마음 놓고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안한다. 지원심의제도 개선을 논하기에 앞서 예술지원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보편적 지원의 다른 표현인 ‘무조건 지원’과 선택과 집중을 보완하는 ‘찾아서 지원’, 그리고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보편적 지원에는 창작 및 발표 기회 지원, 창작 및 발표 장소 지원,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인적 네트워크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평가 지원(대규모 시민평가단과 전문평가단 파견), 행정 지원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단 한 가지의 예술적 장점이라도 발견되면 나머지를 그에 맞춰 제공하는 원칙과 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술지원 사업은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물론 당장 올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선정 심의에도 앞서의 다면 평가 방식을 일부라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이며, 특히 사후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사후 평가를 통해 모인 결과가 쌓이고, 또 보편 복지에 제공된 평가 결과들이 쌓여 객관적 자료가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의 직관적 판단과 비교 분석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매년 결과를 축적하고 경우를 쌓아가다 보면 우리의 평가 역량도 충분히 높은 수준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아마 다면 평가가 필요 없이 전문가의 단독 평가만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길고 까다롭다고 해서 달리 피해 갈 길은 없다. 한시라도 빨리 예술지원의 기초를 전환하고 지원심의회제를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토 론

주제 발표에 대한 질의

이철구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제1주제]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한 창작지원 심의제도에 대한 질의

- 가. 공유형 심의제도에 있어 모든 지원 사업을 똑같은 평가기준이 아닌 기존사업과 5년 이하의 신규 및 신생사업을 구분하여 심의,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 나. 지원심의를 있어 문화예술전문기관(예총 및 10개 협회)의 기관별 주요사업 현황자료를 참고로 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2주제] 예술 수월성 제고를 위한 창작지원 심의제도에 대한 질의

- 가. 지원 단체의 결과보고의 취지의 부합화, 정량(定量)적, 정성(定性)적 평가제도 마련은 문화예술을 수치화된 평가 잣대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
- 나.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 _ 기존사업(역사성, 전통성)과 신규 및 신생사업을 분리하여 심의 하는 것
 - _ 국제, 국내, 지역, 전통, 창작 등을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
- 다. 예측 가능하고 충분한 사업 준비과정을 보장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지
 - _ 지원확정을 시행년도 6개월에서 1년 전에 결정하여 사업의 충분한 준비과정을 확보해 주는 것

토론

예술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근본적인 지원 시스템 바꿔야

장지영 (기자, 국민일보 차장)

문재인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문화 예술정책의 근간으로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가 소위 ‘블랙리스트’로 검열이나 지원 배제 등의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는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가동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과오를 씻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자리로 생각된다.

하지만 촉박하게 이뤄진 토론회 준비 과정을 보면서 예술위가 진심으로 지원심의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당장 올해부터 지난해와 다른 지원이 이뤄져야 되는 만큼 이렇게라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원심의제도 개선을 단순히 공정성과 다양성, 수월성 면에서 논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공정성과 다양성, 수월성 논의는 일시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예술위의 지원심의제도 개선은 문화예술계의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예술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체부를 포함해 문화예술계 전체의 과제이다.

예술위가 앞서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이 된 것은 현재 문체부를 정점으로 위계적 피라미드 형태의 문화예술계 구조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관계는 극히 수직적이어서 문체부 산하기관인 예술위는 중앙부처인

문체부의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예술위 직원들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200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예술위로 바뀌었을 때 ‘민간 자율기구의 출범’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다. 당시 예술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예술위가 민간 중심의 독립적인 위원회로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데서 알 수 있듯 예술위는 기본적으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게다가 예술위는 이후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는커녕 문체부의 영향력 아래 훨씬 가깝게 놓이게 됐다.

이렇게 된 데는 예술위의 기금과 인사 시스템이 문체부의 개입에 무방비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올해 완전히 고갈될 뻔했던 문예진흥기금에 500억원이 긴급 투입됐다고는 하지만 예술위는 불안정한 재원 때문에 앞으로도 기금 확보를 위해 문체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예술위 위원장과 위원 모두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도 문체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만든다.

게다가 문체부는 예술위 외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문화예술 지원기관을 계속 늘려왔다. 이들 지원기관은 예술위가 맡아야만 하거나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국고와 문예진흥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심사도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제대로 평가와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 결국 문체부는 이런 지원기관을 여러 개로 쪼개놓음으로써 예전보다 훨씬 더 지배력을 키워놓았다.

이와 관련해 예술위가 처음 출범할 때 벤치마킹 했던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사례를 살펴보자.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국가로부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업무의 전권을 위임받은 전문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문화예술 지원제도의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영국에서조차 팔길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팔길이만큼 거리를 두지만 손은 대고 있다(arm’s length but hands on)’거나 ‘손바닥 길이 법칙(palm’s length principle)’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잉글랜드 아트 카운슬도 정부로부터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기금은 크게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로부터 받는 국고(Grant-in-aid)와 국립복권기금(National Lottery Fund) 분배금으로 충당된다.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 웨일즈 예술위원회,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는 복권기금 외에 각각 스코틀랜드청, 웨일즈청, 북아일랜드청으로부터 기금을 받는다.

국고와 복권기금의 경우 3년 단위로 지원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역시 개인과 프로젝트 이외의 단체 지원은 3년 단위로 한다. 국립복권기금은 수익금의 50%를 상금으로 활용하고 운영비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한 28%를 각 영역에 분배되는데, 분배금의 20%가 문화예술분야에 배정된다(예전엔 16.67%였지만 2010년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고를 줄이는 대신 복권기금을 늘려줬다).

한국 예술위도 국고와 복권기금을 안정적 재원으로 확보한 뒤 문예진흥의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술 분야에 투입되는 복권기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에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지만 영국에서처럼 문화 인프라 구축과 순수 예술 지원에도 사용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임명한다. 그리고 9개 지부를 포함한 사무국은 실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 1명과 6명의 이사가 전문적 지식과 행정경험이 있는 전문 스태프들을 이끌어간다. 대표이사는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임명한다.

과거엔 런던을 비롯해 잉글랜드 안에 지역마다 예술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했었다. 10개에 달했는데, 2001년 지역 예술위원회가 지역 예술단체들의 고정적 사업에 기금을 배분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로 모두 통합됐다. 지원의 효율을 높힘으로써 그만큼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거나 집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과거 20개가 넘었던 소위원회를 대부분 없앴는데,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제의 전통이 깊은 나라지만 예산이 제한적이다보니 균등배분보다는 효율성과 장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편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적이면서 복합적인 지원을 추구한다는가 기금 외적 지원에 역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경우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만 기본적으로 결정권은 예술위원회 위원회와 사무국에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위의 지원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불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 심사위원풀을 점점 넓혀 왔다. 그런데, 최근 블랙리스트 때문에 더더욱 예술위의 지원심사에 대한 불신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지원심사에 참여한 사례가 적지 않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술위가 예술계와의 소통이 적은 채 관료화 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쨌든 현재 예술위의 지원심사 개선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일반 시민도 심사위원에 넣는 한편 일부에선 극단적으로 추천제를 실시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원심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다 막상 아까운 예산을 회의비와 심사비에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필요가 있다.

이외에 예술위 개선책의 하나로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제안도 나온다. 그런데 예술위 출범 후 얼마 안돼 각종 소위를 발족시킨 바 있다. 그런데, 예술위 자체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분야 예술가들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소위까지 장르별로 더 쪼개다보니 장르 이기주의에 빠져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다. 게다가 현장예술가 중심이다보니 예술행정을 잘 몰라 건설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현재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를 보면 과거에 비해 예술가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다. 1970~80년대 경제가 좋지 않거나 대처리즘에 따른 예술 지원 축소 때에는 오히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오히려 1990년대 말부터 영국 경제가 호황을 맞고 디자인 등 창조산업이 꽃피우면서 불만이 많아졌다.

이와 관련해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관료화와 책임감 부재, 기금집행의 투명성 논란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심지어 문화정책으로 유명한 영국 워릭대의 엘레오노라 벨피오레 교

수 같은 학자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를 비판한 “On bullshit in cultural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otes from the British case”(2009) 같은 논문을 발표했을 정도다. 나아가 2000년대에는 관료화되고 개혁이 불가능한 예술위원회를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왔다.

하지만 2008년 집권한 영국 보수당 정권은 2010년 발표한 2011~2014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을 4억4900만 유로에서 3억4900만 유로로 30% 깎는다고 발표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2012년 런던올림픽이 끝난지 얼마 안돼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국고 삭감에 따라 구조조정에 착수, 정직원 559명 중 21%인 118명을 해고했다. 이후에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펼 보수당 정권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느 때보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가치가 높아졌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최근 적극적으로 예술가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창구에서 기금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예술가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예술위도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잃어버린 예술가의 지지와 신뢰도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

